

대법관 재제청 충돌… 與 “조희대 압박” 野 “사법부 수호”

대법원장 공세·엄호전으로 번져
민주, 내부 의견 묵살 의혹 제기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과 각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재명 방탄’에 있다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관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노태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반려했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재제청 공문’을 보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 갈등이 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들은 민심을 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

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중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독단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격

노했다고 한다”며 “격노를 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라든가 중대사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희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유를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수원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꼭 집어서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

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임명할 스물 두 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품(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순방 마친李, ‘인사·사법·안보’ 현안 산적

참모진 개편·DMZ 사고 등 난제
순방 성과, 정책으로 연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내치에 복귀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해결해야 하는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저녁 9시쯤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내외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 실장은 순방 출국 당일인 지난 21일 인사 논란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만큼, 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도 결정이 필요하다. 정책실장 인선 관련해서는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민생’으로 옮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30 개각 지명자 6명 중 용혜인(성평등가족부)·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수습과 인사검증시스템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맞물려 공식인 법무부 장관 후임도 신속하게 지명하는 것도 과제다.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여권의 일부 강경파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출범 등 형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에도 속도전이 일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여권과 대법원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다는 점도 난제다. 거기에서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공세를 가하자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에 나서, 여야 간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된 상태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임명권’을 둘러싼 해석이 정반대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의 후속 조치 등 외교안보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뢰 사고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의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연진 기자 syj@

장동혁, 강신철에 “국민 위해 희생해야”

〈국민의힘 대표〉 〈국방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두고
“생도에 찢지 못할 아픔 안길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때가 됐다”며 “때로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그러다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님을 지켜준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안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

련해서는 “민약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참략 행위이자 대한민국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전시에 내 전우가 적에 매설한 지뢰에 희생됐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지뢰폭발 사고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잘못된다면 그 이전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던 선후배 장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육사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후배 생도들에게 찢지 못할 아픔과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맨 처음 육사에 입학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지금도 장관님을 보면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후배 생도들

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장관이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바람을 잘 기억해 달라”며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다 얻었던 장관으로서 그동안 얻은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국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조심 잃지 않고 장관직 수행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정부와 함께 적에게는 가차 없고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 역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DMZ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재경위, 국감 증인·참고인 10명 채택

김용범·여한구, 명단서 제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8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 10명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 시작해 같은 달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재경위는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해외 모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경수 기자